

# 中企, 임피제 도입 주저...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책 나와야”

**중기연 임금피크제 현황 보고서**  
대법 무효 판결에 혼란 가중  
대기업 비해 도입 비율 절반  
“지원책 등 활용 악영향 줄여야”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이 가뜰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추가로 펴거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일 펴낸 ‘중소기업 임금피크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차별’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계획

## 임금피크제 도입 판단에 따른 점검 사항

판단기준	점검 사항
임금피크제의 도입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령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생산성 변동 추이</li> <li>도입목적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세대의 상생을 목적으로 내지 생산성 제고, 인건비 완화</li> </ul>
임금피크제 도입 이유에 맞는 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신규 채용 규모 / 인건비 / 퇴직시 평균연령</li> <li>그밖의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 현황</li> </ul>
임금삭감 정도 및 이를 수급할 만한 조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금피크제 도입시 임금 삭감 정도(정당한 삭감을 제시 등)</li> <li>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업무내용, 강도 / 근무시간 / 별도 직무 부여 여부</li> <li>이직, 퇴직에 대비한 교육 등 보장책 마련 여부(전직, 재취업, 창업, 퇴직 후의 생활, 교육시간 확보(20시간), 퇴직설계 컨설팅, 교육훈련비용 등)</li> <li>고용보험법(시행령)상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 여부(제17조, 제28조)</li> </ul>

자료/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임피제)란 근로자의 정년연장 또는 정년보장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이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증가시켜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사 간 입장을 적절하게 조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말한다. 임피제에는 ▲고용유지형 ▲정년연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의 4가지가 있다.

중기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기업규모별 임피제 도입 비율은 1~4명(16.4%), 5~9명(26.0%), 10~29명(24.1%), 30~99명

(22.0%), 100~299명(36.9%), 1000명 이상 대기업 61.8% 등으로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대기업은 52%가 임피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21.8%에 그쳤다.

‘도입 계획이 있다’는 답변도 대기업(3.3%)보다 중소기업(2.1%)이 낮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피제 도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도입할 계획도 많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임피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최초로 임금이 깎이는 ‘임금감액 연령’은 중소기업이 56.8세로 대기업의 57.2세보다 0.4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감액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도 중소기업(22.7%)이 대기업(10.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임피제에 따른 임금감액을 상대적으로 빨리하고, 더 깎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중기연구원 황경진 연구위원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정년제를 운용하지 않거나 정년이 있어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청년층의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인력이 늘 부족해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귀중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임피제 활용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정년을 연장하는 행태로 임피제(정년연장형)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10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3분의1은 임피제를 시행하고 있

고, 중소기업 취업자 중 50대 비중이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임피제 도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도입 계획 중소기업 부담 증가→임피제 도입 속도 둔화→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을 고려할 경우 현실적인 걸림돌은 인건비 부담인데,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정책이 임금피크제”라면서 “도입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고령자를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년연장과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임금체계 준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상생 노사문화 구축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가

#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인간중심 도시 만들 것”

스마트시티 미래 비전 발표  
“기술-자연 하나되는 미래 구상”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교통과 행정, 주거, 에너지 등 인간 중심의 미래도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의한 생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인구 밀집에 따른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 교통혼잡과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정부는 물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 시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7월 3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에서 개최되는 ‘2022 세계도시 정상회의’(WCS)에 참가해 스마트시티 비전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세계도시정상회의는 세계 각지의 도시 관계자와 정·재계, 학계의 인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싱가포르 ‘살기좋은도시센터’(CLC)와 ‘도시재개발청’(URA) 주관으로 2년마다 개최된다.

현대차그룹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 축소 모형물을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지영조 이노베이션담당 사장은 정상회의 폐널로 참석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지 사장은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은 인간 중심 도시를 위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 전시

한 현대차그룹의 비전”이라며 “현대차그룹은 기술과 자연이 하나되는 미래 도시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MG 그린필드 스마트시티 마스터 모델은 현대차그룹이 그리는 이상적인 미래 도시 비전을 구체화한 콘셉트다. 그린필드 스마트시티는 최초 설계부터 스마트시티로 설계된 도시를 말한다.

현대차그룹이 이번에 전시한 모델은 지상은 사람 중심, 지하는 기능 중심으로 설계됐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물류, 친환경 에너지 시설 등 주요 인프라는 지하에 위치해 지상을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남겨두고, 도시 어느 곳에서든 보행거리 내에 자연이 위치하는 구조로 사람과 자연을 연결한다.

지 사장은 “항공 모빌리티와 지상 모빌리티 솔루션이 도시 경계를 재정의하고, 사람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며, 도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현

대차그룹은 스마트시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기업인 토요타는 지난 2020년 일본 내 옛 자동차 공장 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시티 ‘우븐 시티’를 건설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우븐 시티는 토요타 후지공장 부지(약 70만 제곱미터)를 활용해 자동차,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홈, 인공지능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 겸 생활공간으로 구축된다.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핀란드의 칼라타마는 아파트 단지 내 자율주행 버스 ‘소호요아’를 중심으로 트램과 공공자전거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상하이시와 함께 머신러닝을 반복하는 AI 기술을 통해 대중교통과 도심 내 CCTV, 얼굴 인식 카메라, 드론을 제어하는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中 제조업 PMI 하락... 경기위축 위기 봉착

(구매관리지수)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50.4 기록... 전월비 하락세 전환  
코로나 확산·부동산 침체 등 영향

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경제를 끌어올렸던 제조업마저 주춤하면서다.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물가가 치솟았고, 코로나19 재확산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수요가 부진했다.

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민간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가 5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월(51.7%) 대비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물론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의 예상치(52)를 크게 밑돌았다.

PMI는 신규 주문이나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에 관한 설문을 통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이하이면 경기 위축으로 해석한다.

차이신 제조업 PMI는 주요 도시들의 봉쇄가 해제되면서 6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변종의 확산과 부동산 침체 등으로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

차이신 인사이트그룹 왕저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기업이 직면한 전력 부족과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장 수요와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지난 6월 당시 25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축된 공급업체의 납기일이 7월에는 다시 길어졌고, 미래 생산 기대 수치도 수요 위축을 우려해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발표된 7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49다.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중국 남부 천저우 항구의 컨테이너 터미널. /신화·뉴스시스

차이신 PMI가 민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면 공식 제조업 PMI는 대기업 및 국유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제 심리 수준이 다소 악화됐다”며 “대내외 환경이 더 복잡하고 엄중해졌으며, 기업들의 생산과 운영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업과 건설부문 동향을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는 53.8이다. 전월(54.7)과 전망치(53.9)를 모두 밑돌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현재 중국 경제의 회복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지 않다”며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산재하고 내부적으로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는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 상황도 악화됐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축소에 나서면서 고용 지수는 지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 중국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안심미 기자 smahn1@